

# 내외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대응

—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고 성 준\*

## I. 신국제질서의 대두와 동아시아의 변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1990년대에 있어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큰 변화는 그 동안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동구공산국가들의 몰락과 통일 독일의 탄생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인해 냉전구조가 거의 완전하게 허물어졌고 새로운 유럽의 구축을 위한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경우 몽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의 통치를 고수하고 있으나 각국가의 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 사회주의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수정을 하고 있어 아시아의 냉전질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냉전질서에 대한 변혁은 북한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북한은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의 탄생과 북한 사회주의의 전개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구축과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 이념과 경제적 특성이나 대남대의 관계는 지금까지 냉전시대의 틀 안에서 형성·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주체사상의 본질은 냉전시대에 있어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과 전술의 총체다.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시대가 20세기와 함께 마감되어가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대남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기존노선에 대한 재검토와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겠다.

### 1. Geoeconomics의 시대

특히 냉전질서의 변화가 1978년 12월 중국에 덩소평 정권이 등장하여 전개한 실용

---

\* 제주대학교 교수

주의노선에서 비롯되어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의 최고권력자로 등장하면서 추진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이 계기가 되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냉전질서의 종언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은 아놀드 토인비식의 도전이며 이에 대해 응전을 안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냉전 체제가 「이데올로기의 시대」였다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클린턴이 말하듯 「경제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다. 그동안 국제질서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진 이데올로기와 군사력보다는 무역·금융·기술의 흐름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제질서 즉 Geoeconomics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국제관계의 주축은 교역, 투자, 기술이전 등 경제위주의 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력에 의한 지역통합이 국제관계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은 이미 12개국인 유럽공동체(EC)라는 거대한 단일시장을 형성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라는 단일시장으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도 자유무역지대나 단일시장권 형성 등 경제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경향은 냉전시대에 이념의 경계선에 의해 구획되던 세계경제지도를 새롭게 대치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록화추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지역간의 통신, 통행, 통상의 확대, 기술이전 등으로 상호의존도가 증대되면서 국경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지구촌화와 함께 신국제질서의 새로운 특징이다.

## 2. 동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이념화 추세

위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 이념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경제적 의존성의 확대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존의 이념 고수정책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78년부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과 자본주의 경제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중국은 89년에 천안문사태를 겪기도 했으나 지난 3월 31일 폐막된 제 8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정책을 더욱 확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의 사회주의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대외적으로는 개방화를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발전과 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탈사회주의화 경향은 소련의 붕괴와 동구의 몰락의 원인이 국내경제의 파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경우 정책의 기초는 국내경제발전에 두고 있기에 상당 시간 자본주의 경제의 수용과 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3.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공동체

세계인구의 40%와 육지면적의 25%를 접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현재 국민총생산(GNP)은 세계 GNP의 48%에 해당하는 10조달러이며 무역도 세계 총무역량의 38%인 1조 5천 6백달러에 이른다. 또한 아-태국가간의 교역의존도가 단일시장을 형성한 EC(60%)보다 큰 65%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태평양무역(2천7백달러)은 대서양 무역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일본, 아시아 NICS, ASEAN을 포함한 서태평양 9개 나라는 세계의 공업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대 중반의 10%에 1980년대 중반에는 23%로 경중 올려 놓았다. 이는 서태평양 가장자리에서 '공업생산능력의 세계적인 재배치과정'이 보다 거세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수입 역시 강화되어 침체되어가는 세계경제를 수요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세계 무역의 연평균 성장은 8.4%였으나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은 13.1%를 기록했고 아시아 신흥공업국 4나라는 14.3%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여기에 1980년대 이후 과감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9%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 8대 경제대국이 된 중국과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극동러시아,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역할이 강화되면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될 것임은 틀림 없다. 2000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총 국민총생산은 약 6조달러에 가까울 것이고, 총수출액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력은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나 유럽공동체(EC)와 거의 맞먹게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리적 영역이 매우 광범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발전단계와 경제구조가 매우 상이하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정치, 경제적 이해의 득실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역내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지역올타리쌓기>추세에 맞추어 경제공동체형성을 통해 완화시켜 가려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공동체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APEC)를 들 수 있다.

둘째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제를 형성되게 되는 서남해(황해)경제권과 동북

아 경제권등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세째로, 말레이시아의 마하퇴르수상이 제안한 ASEAN과 한국, 일본, 중국등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권(EAEC)을 들 수 있다.

## II.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내적 위기

### 1. 합영정책의 한계와 경제 실상

북한은 지난 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합영사업에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의 합영은 북한내 유치가 130건, 해외진출이 40여건 등 총 170여건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유치가 64건이고, 해외진출이 21건으로 총 87건이다. 지금까지의 합영사업의 특징으로서 첫째 대상국이 일본, 특히 조총련제자본과의 합작 이주를 이루고 있어 북한이 바라는 서방국가들의 기술이나 자본의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로 업종별로 보면 북한은 공업부문에서의 합작에 최대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서비스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개방화정책을 대표하는 합영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개방을 뒷받침할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실용주의로선에 입각 실시하면서 대외개방화정책을 추진하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자력갱생의 자립경제정책과 구조에 대한 개혁없이 선택적 부분적 개방화를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하에서 시장사회주의로의 분명한 방향전환을 보여 주고 있는데서 이루어 왔다면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 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을 추진하니 성과가 저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경제체제의 개혁과 그에 따른 본격적인 대외개방화를 주저해 왔는가? 북한의 지도층은 경제체제개혁과 경제개방화가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사회를 '지상낙원'으로 살아온 북한 인민에게 비쳐진 외부세계의 모습과 자신들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40여년동안 내외의 큰 도전없이 안정적으로 김일성체제를 유지해왔는데 그 근본 요인은 폐쇄경제, 주민통제, 주체사상등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과 본격적인 개방화조치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북한의 합영법이 한계에 직면한 이유는 작은 내수시장의 규모와 투자여건의 미비로 서방기업의 진출시 채산성이 불투명하

다는 점과 그동안의 외채지불연기로 인한 대외 신용도측면에서 낮은 인지도 그리고 서방제국과의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 경제실상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러시아의 한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93. 3. 31. 「조선일보」참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년은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87~93)이 종료되는 해이다. 이 기간동안 공업생산액 1.9배, 농업 생산액 1.4배, 국민소득 1.7배를 비롯, 「10대 전망목표」실현이 주요 과제로 설정돼 있다.

이 계획목표들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7개년계획기간의 초기인 87~88년의 공업생산량 증가가 2~3%를 넘지 못했다. 87년에는 13차 평양축전을 치르는데 8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89년에는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에 치중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소홀해졌다.

주민들의 근로의욕 상실로 80년대 후반부터 초반까지 GNP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89년의 혹심한 가뭄, 90년의 흉수로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됐다. 89년 GNP는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며 전력(-14%), 석탄(-8%), 비철금속(-14%), 석유제품(-11%), 시멘트(-8%), 화학비료(-5%)도 생산 감소를 가져 왔다. 90년 들어 수력발전의 확장에 힘입어 이러한 감소세가 주춤했다.

91년 북한 당국은 이듬해의 金日成 80회 생일을 앞두고 그의 치석을 부각하기 위해 석탄, 철강, 전력, 비철금속, 시멘트, 목재 등 주요 공업생산 품목의 증산에 차를 가했으나 그 해 GNP는 약 3% (1인당 GNP는 -5~6%) 줄어 들었다.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로부터의 원유 공급과 원자재 적기 조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북한 GNP의 45%는 공업생산이 차지하고 총 공업생산이 3분의 2가 중공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고작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90~92년동안 석탄, 철광석, 비철광물의 생산 극대화 당면과제로 떠올랐으나 석탄 및 철광석 생산량은 4천 9백 50만t으로 90년 들어 꽤 향상됐다. 91년의 총 발전량은 3백 20여 kWh로 90년 수준을 넘지 못한다. (3차 7개년계획 목표치는 1천억 kWh)

북한의 기계공업은 선진국의 50~60년대 수준으로서 약 4백개의 관련 기업소가 있다. 화학공업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의 연산 10t 건설, 사리원카비료연합기업소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91~92년 경공업 부문에서도 이렇다하게 내놓을만한 것이 없다. 다만 봉제산업은 외국과 합작으로 다소 활발한 편이다. 평양과 원산에는 수출용의류제조업체가 가동중이며 여기는 독일 및 일본의 기계가 들어

가 있다.

북한경제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와 식량부문이다. 에너지는 지난 1990년도부터 소련이 그동안의 방식과는 달리 원유공급에 있어 국제시장가격에 입각한 경화체제를 요구하면서 정유능력(350만톤)에 비해 약 100만톤이 부족한 252만톤을 도입했고 91년에는 150만톤 이하로 줄었다. 그 결과 전력생산이 크게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40%로 떨어졌다. 식량생산의 경우를 보면 90년에는 480만톤을 생산했다. 이 양은 89년과 대비해 12%가 모자라는 양이다.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최소수준의 식량배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91년에 160만톤의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했고, 매일 1인당 곡식배급량도 감소되었다. 이러한 에너지와 식량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 92년 11월 이후 북한은 한국의 종합상사들에게 제3국산 곡물과 원유를 공급해주면 북한산 아연피나 철강재 등으로 대금을 결제 해주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의 부족으로 원유와 곡물의 수입에 문제가 있으며 중국마저도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는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고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 2.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위기 징후

분단이후 북한사회에서 일어난 큰 변화의 하나가 인구구성의 변화다. 분단이후 출생한 사람이 전체인구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혁명세대라고 불리는 분단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17.5%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인구의 대부분이 이미 혁명2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2세대는 일반적으로 일제의 지배, 분단의 고통, 절대빈곤을 체험한 혁명세대에 비해 사상성과 당성 그리고 혁명성이 투철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혁명 2세대는 혁명세대에 비해 경제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소련 및 동구를 유학중인 북한 학생들이 소련 및 동구권의 높은 생활수준, 풍부한 물건, 자유로운 생활등을 목격하고 북한에 사는 인민들의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남한 인민들의 삶이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인민들의 삶보다 운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 많은 유학생들이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대해 회의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폐쇄적인 북한사회도 국제화의 조류 속에서 차츰 부분적이거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면서 체제불안 내지 동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현 실정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왕래와 중국에 거주

하고 있는 친지방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싹트게 된다. 이는 점이다. 중국인민들이 70년대까지는 북한보다 훨씬 낮은 생활 수준에 머물렀으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인민들보다 훨씬 잘 산다는 사실이 북한인민들에게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있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인식은 경제침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생활 수준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북한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북한사회에서 싹트고 있는 것이다. 식량과 생활필수품 약탈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군인들이 약탈사고를 저지르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경찰시설이 파괴되거나 탄광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발전의 둔화, 당과 정부를 비롯한 지배계급의 특권화, 이에 따른 계층간의 불평등 등이 체제불만요인으로 더해지고 있어 북한체제에 대한 우월성이 점차 북한사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 「로동신문」의 지난 2월 22일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는」 사실은 북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료들과 인민들간의 심각한 괴리 현상이 체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북한당국의 문제인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일군들은 누구도 자신이 지닌 인민에 대한 복무 태도와 인민을 위해 해 놓은 일을 놓고 자부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관료들의 직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 Ⅲ.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개

#### 1.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사회주의의 고수

김정일의 92년 1월 3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이라는 담화는 소련, 동구사회주의의 붕괴원인을 외부적 요인보다도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다음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되어 있는 인민대중에 대한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의 3대 구성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사회주의 정권, 그리고 사회주의의 경제제도에 있어서 사회주의사상을 가진 사람의 역할을 거의 도외시 하고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자연발생적인 역할을 통해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기본 원칙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신에 사상에서 벗어나는 정치개혁으로 사회주의 변질과정을 촉진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나라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성 원칙에서 상호연대를 강화해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소련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의 당에 대해 내정간섭으로 일관함으로써 사상적인 통일과 동지적인 협조관계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인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는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와해는 집권공산당들의 당건설과 활동에서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다지지 못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당건설에 있어 혁명적 원칙을 포기했으며, 둘째, 당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확립하지 못했고, 셋째,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지 못했으며, 넷째, 영도의 계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변혁과 변화에 대해서 북한 사회주의를 고수·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우리식대로 살자'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복잡하게 조성되는 혁명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체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식대로 살아갈 데 대한 당의 혁명적 방침을 나게 관찰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조성된다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과 입장, 주체적 입장을 견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우리식대로 살자'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사회주의 원리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주체사상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김정일은 93년 3월 4일 당기관지 「근로자」(93.3호)에 게재된 "사회주의에 대한 훼손을 허용될 수 없다."라는 장문의 담화에서도 사회주의의 고수를 역설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 담화에서 동구사회주의의 붕괴는 내부의 사상적 동요가 결정적 이므로 북한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함에 있어 정신무장의 신념화·도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교양과 수령-당-인민의 일체감이 무엇보다



다도 긴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온갖 꾀방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가장 철저히 구현될 사회이다”라고 못 박고 있다.

## 2. 정치 : 김정일 체제로의 전이

### 가. 김일성후계체제의 확고화

1990년 5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함께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확고히 조치를 취했는데,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노동당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에 있어서도 그가 김일성 다음의 실권자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91년 노동당 6기 19차 전원회에서는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의 최고사령관을 김정일이 그대로 이양받은 것이 되며, 따라서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의 총지휘관으로 군을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92년 4월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일을 군 최고 사령관 취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국방위원회 위상을 높여 놓았다. 이를 통해 북한 지도부는 군통수권을 국가주석과는 별도의 기구인 국방위원회로 이양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관련 조항을 따로 떼내고 여기에 세 조항을 추가시켜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방장(58, 49, 60, 61조)을 편성하였다. 추가된 조항은 무장력의 사명, 자위노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미풍발양이다. 이러한 국방장을 신설하고나서 국가기구에서 국방위원회(111조)의 위치를 격상시켜 놓았다. 북한의 구헌법 93조에 있던 ‘주석은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국가의 일체적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석이 아니고 최고사령관이 될 수 있게함으로써 김정일의 군사령관 취임의 위헌시비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헌법수정은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맡지 않고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방분야에 대한 장악을 보다 확고하게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를 종전 중앙인민위 산하 부문별 위원회의 성격에서 주석다음의 기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통한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구축하였다.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이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헌법 조항(구헌법 제99조)을 삭제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김일성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 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대별되는 정, 군 이원체제가 가능

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김일성 후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는 마침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3대 지주인 당-정-군의 통수권중 군권을 장악한 것이다. 이로서 북한의 권력승계작업은 김정일이 언제 어떠한 수순을 밟아 국가주석직과 노동당 총비서직을 김일성으로부터 이양받는가 하는 것 뿐이다.

#### 나. 권력구조의 정비

지난 12월 최고 인민회의 제9기 제4차회의에서는 정무원총리였던 연형무를 강성산으로 교체하고 경제부처장을 교체하는 등 당정의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관계를 담당해온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를 국가계획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김달현과 당의 대외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당비서 김용순을 정치국후보위원으로 보선하고 사상·선전선동분야의 김국태, 김기남을 당비서로 선출했으며 김정일의 인척인 장성택, 언론분야의 정하철, 김기룡 등 9명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중앙위원으로 승격시켰다. 이번에 기용된 김달현, 김용순, 김국태, 김기남 등은 모두 김정일 시대에 부상된 사람들이며, 혁명 2세대에 속하고 있는 이들이 중요한 직책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은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공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기술관료 및 정치사상교육관련 당료들이기에 체제유지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이라는 2중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 주체사상의 교양강화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변혁이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장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에 북한은 김일성의 92, 93 신년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민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고주체사상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92년의 경우 「전국주체사상토론회」(4. 1-3), 「군모범전투대회」(9. 4-5), 「함경북도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9. 4), 「전국교육일군대회」(9. 4-5), 「함경북도 당 전원회의 확대회의」(9. 4), 「전국교육일군대회」(9. 20-22), 「전국열사가족대회」(10. 1-2), 「조선지식인대회」(12. 9-10) 등 각종집회를 개최하며 북한사회주의 체제고수를 위한 김일성 김정일への 충성과 외부사조 유일방지를 위한 주체사상의 교양노력을 배가 하였다. 특히 북

한은 과학, 교육,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부문에 종사하는 지식인들의 사상동요를 의식하여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집회와 대중매체를 통해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 3. 경제 : 제한된 개방화

김일성을 90년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권의 개혁 특히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사회주의권의 경제개혁은 곧 체제붕괴 내지는 체제위협을 가져온다고 김일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는 북한사회주의가 경제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을 소련과 동구식의 자본주의적 방법에 입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일도 92년 1월의 담화에서 사회주의는 소유에서 다양화와 경제의 시장화 등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원칙을 고수하면서 제한적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 가.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원리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은 다음의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다. 둘째, 당위원회 중심의 경제관리이다. 셋째, 계획경제의 실시이다.

#### 나. 제한적 개방정책의 추진

북한은 90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단계의 대외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무역지대」의 신설이다. 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 국제회의에서는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 개발구상안」을 표명했고 12월에는 나진·선봉지역 621km<sup>2</sup>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했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 자유무역 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미 외국인 기업법, 기업소득세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출입국 등 모든 관련 법규들을 1993년 상반기까지 정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년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것은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특구는 국내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남겨둔채 그 일부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시켜 그 위에 서방측 시장 메카니즘의 국내침투는 정책당국이 주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라 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특구 설치를 발표하여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분위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이번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개방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제16조) 외국의 법인과 개인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제37조)고 하여 대외경제개장정책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92년 10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인 투자법」, 「합작법」등을 채택 발표했다.

이는 합영법 제정 이후 야기된 문제점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제한적이거나 개방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수출입품목의 무관세, 3년간 소득세 감면조항명시, 과실송금허용 등 특혜조항에다 투자기업의 경영비밀보호, 국유화금지등 법적보장장치를 명시하고 있어 84년의 합영법보다 전향적이다. 이 법은 한국 기업의 참여를 가능케하는 조항까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단독투자기업은 자유무역지대에서만 가능하고, 종업원의 채용은 북한의 노동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외국기업에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철저히 통제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와 함께 불어닥칠지 모르는 자유경제체제의 바람을 가능한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4. 핵개발 : 다목적 카드

북한은 지난 3월 12일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7차회의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통고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3월에 이 조약에 가입했는데, 이 조약의 목적은 핵무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체제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다.

북한이 NPT탈퇴가 팀스피리트 훈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압력에 대항하는 일시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돌입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는 NPT복귀의 댓가로 미·일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김정일승계체제 유지와 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 등을 노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격적인 탈퇴배경에는 북한군부의 지지도가 약한 김정일이 집권능력을 군부에 과시하기 위한 것과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돌리기 위한 북한내부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10여년전부터이며, 대단한 노력과 지원을 들여온 것

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핵무기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으나 현단계에서는 북한체제 고수를 위한 다목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IV. 결론 및 전망

북한은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개혁·개방의 길을 택하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고수를 위한 김정일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방을 장으로 취급한 것이나 국방위원장을 격상시킨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난 타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한적 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도 헌법개정에 삽입됐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한 것도 <체제고수>전략에 따른 전술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빠른 시일내에 온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느리지만 완만한 체제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북한이 택하고 있는 경제개방에 서방자본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나 기술이 유입될 때 묻어들어오는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정권유지가 어려워질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은 체제적 모순이 누적되어 그 결과 내부적인 개혁의지와 개혁이 표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특히 현재 최고 권력자인 김일성의 사후에 그것이 구체화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통일정책도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92년 12월에 남북한 사이에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표명하여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이를 위한 세부적 실천사항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여 남북한 관계는 실제적으로 합의서 채택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대한 분석은 여러측면에서 가능하나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여전히 기본체제를 그대로 견지하려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발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이 지니고 있는 남한 정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지도자들이

남한정세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남조선 혁명노선」의 견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질때부터 북한체제의 변화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남한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 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2월 대통령선거 결과는 그동안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정통성 시비논쟁을 종식시켰다. 지난 3월 새롭게 출발한 문민정부는 남한사회에 있어 부와 파행적 분배구조를 비롯한 제반 불평등과 갈등요소를 과감히 해소하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 사회가 안고있는 제반 정치·경제·사회적 병리현상이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의 토대가 되어왔기에 새정부의 개혁 작업이 결실을 거두고 남한사회에 이념의 조화와 계층과 지역간의 화합이 진정으로 이루어 질 때가 북한이 체제변화를 단행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